

## 1.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공공관리론에서는 국민을 납세자나 일방적인 서비스 수혜자가 아닌 정부의 고객으로 인식한다.
- ② 탈신공공관리론은 신공공관리론의 결과로 나타난 재집권화와 재규제를 경계한다.
- ③ 뉴거버넌스론의 하나인 유연조직모형에서는 관리의 개혁방안으로 가변적 인사관리를 제시한다.
- ④ 신공공서비스론에서는 공익을 공유된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물로 인식한다.

[해설] ②(틀림) 탈신공공관리론은 신공공관리론의 결과로 나타난 재집권화와 재규제를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재집권화와 재규제를 주장한다.

<신공공관리론과 탈신공공관리론>

| 비 고   |        | 신공공관리론(NPM)                   | 탈신공공관리론(post-NPM)                    |
|-------|--------|-------------------------------|--------------------------------------|
| 정부 기능 | 기본 철학  | 시장 지향주의<br>- 규제완화             | 정부의 정치·행정적 역량 강화<br>- 재규제, 정치적 통제 강조 |
|       | 주요 가치  | 경제성, 능률성                      | 민주성, 형평성도 함께 고려                      |
|       | 정부 규모  | 감축 - 민영화, 민간위탁                | 민영화에 대한 신중한 접근                       |
|       | 서비스 제공 | 시장 - 내부시장, 계약                 |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파트너십                     |
| 조직 구조 | 기본 모형  | 탈관료제                          | 관료제와 탈관료제의 조화                        |
|       | 구조 특징  | 비형구적·유기적 구조<br>- 임시조직 활용, 분권화 | 재집권화(조정 중시)<br>- 분권화와 집권화의 조화        |
|       | 조직 개편  | 소규모 준자율적 조직으로 분절화(책임 운영기관)    | 구조적 통합을 통한 분절화 축소, 총체적·합체적 정부        |
| 관리 기법 | 기본 철학  | 자율과 경쟁, 성과와 책임                | 자율성과 책임성의 증대                         |
|       | 인사 관리  | 개방과 경쟁, 성과 중시                 | 공공 책임성 중시                            |
| 기타    | 역할 체계  | -                             | 역할 모호성 제거, 명확한 역할관계의 안출(案出)          |
|       | 고려 사항  | -                             | 환경·역사·문화적 요소 고려                      |

[정답] ②

참고 : 위계점 9급행정학개론(2017년판), pp.162-163.

## 2. 다음 조직구조의 유형들을 수직적 계층을 강조하는 구조에서 수평적 조정을 강조하는 구조로 옳게 배열한 것은?

|            |            |
|------------|------------|
| ㄱ. 네트워크 구조 | ㄴ. 매트릭스 구조 |
| ㄷ. 사업부제 구조 | ㄹ. 수평구조    |
| ㅁ. 관료제     |            |

① ㄷ - ㄹ - ㄴ - ㄱ - ㄱ

② ㄷ - ㄹ - ㄱ - ㄱ - ㄴ

③ ㄹ - ㄷ - ㄴ - ㄱ - ㄱ

④ ㄹ - ㄷ - ㄱ - ㄴ - ㄱ

[해설] 기계적 구조(관료제)와 유기적 구조(탈관료제)

| 기계적 구조<br>(관료제) | 기능구조                | 사업구조 | 매트릭스구조 | 수평구조(팀제) | 네트워크구조 | 유기적 구조<br>(학습조직) |
|-----------------|---------------------|------|--------|----------|--------|------------------|
|                 | 차별화 전략              |      |        |          |        |                  |
|                 | 수평적, 조정, 학습, 혁신, 신속 |      |        |          |        |                  |
|                 | 저비용 전략              |      |        |          |        |                  |
|                 | 수직적, 통제, 능률, 안정, 신뢰 |      |        |          |        |                  |

[정답] ③

참고 : 위계점 9급행정학개론(2017년판), p.336.

### 3.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방법론적 전체주의 입장에서 제도를 개인으로 환원시키지 않고 제도 그 자체를 전체로서 이해함을 강조한다.
- ② 역사적 제도주의는 선진 제도 학습에 따른 제도의 동형화를 강조한다.
- ③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기존 경로를 유지하려는 제도의 속성을 강조한다.
- ④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조직구성원이 제도를 넘어선 효용극대화의 합리성에 따라 행동하기보다 주어진 제도 안에서 적합한 방식을 찾아 행동할 가능성이 높음을 강조한다.

[해설] ①(틀림)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방법론적 개체주의 입장에서 제도를 개인으로 환원시켜 이해한다. 이에 반해 역사적 제도주의와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방법론적 전체주의 입장에서 제도를 개인으로 환원시키지 않고 제도 그 자체를 전체로서 이해한다.  
 ②(틀림) 선진 제도 학습에 따른 제도의 동형화를 강조하는 것은 사회학적 제도주의이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역사적 맥락과 거시구조적 분석을 통해 국가마다 역사적 맥락과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제도나 정책이 상이해진다는 점을 중시한다.  
 ③(틀림) 기존 경로를 유지하려는 제도의 속성(경로의존성)을 처음 강조한 것은 역사적 제도주의이다. 다만, 사회학적 제도주의도 제도의 경로의존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논란이 된다. 다만, ④번 지문이 명확하게 옳기 때문에 ③번은 상대적으로 보아 틀리다고 보아야 한다.  
 ④(옳음)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조직구성원이 제도를 넘어선 효용극대화의 합리성에 따라 행동하기보다 주어진 제도 안에서 적합한 방식을 찾아 행동할 가능성이 높음을 강조한다. 즉,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결과성의 논리보다 적절성의 논리를 중시한다.

[정답] ④

참고 : 위계점 9급행정학개론(2017년판), pp.151-155.

### 4.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의 종류가 아닌 것은?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 ③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합동평가
- ④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해설] ③(틀림) 합동평가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국고보조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주요 시책 등(국가적인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시책,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시책)에 대하여 국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제도이다.

[정답] ③

참고 : 위계점 9급행정학개론(2017년판), pp.314-317.

### 5. 행정의 가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합목적성을 의미하는 경제성(economy)은 그 자체로 목표가 되는 본질적 가치다.
- ② 적극적 의미의 합법성(legality)은 상황에 따라 신축성을 부여하는 법의 적합성보다 예외 없이 적용하는 법의 안정성을 강조한다.
- ③ 가외성(redundancy)은 과정의 공정성(fairness) 확보를 위한 수단적 가치다.
- ④ 능률성(efficiency)은 떨어지더라도 효과성(effectiveness)은 높을 수 있다.

[해설] ①(틀림) 경제성(economy)은 비용 절감을 강조하는 행정이념으로서 행정의 본질적 가치가 아니라 수단적 가치에 해당한다.  
 ②(틀림) 소극적 의미의 합법성은 법의 안정성을 강조한다. 이에 반해 적극적 의미의 합법성(legality)은 상황에 따라 신축성을 부여하는 법의 적합성을 말한다.  
 ③(틀림) 가외성(redundancy)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둘 이상의 기관이나 절차가 존재하는 현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체제의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장치를 말한다. 따라서 가외성은 과정의 공정성(fairness) 확보가 아니라 예측하지 못한 잘못·실수 또는 실패를 줄이고, 조직의 안정성(안정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적 가치이다.  
 ④(옳음) 효과성(effectiveness)은 목표의 달성도를 의미한다. 이에 반해 능률성(efficiency)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의미한다.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은 낮더라도 목표를 달성할 경우 효과성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④는 옳은 표현이다.

[정답] ④

참고 : 위계점 9급행정학개론(2017년판), pp.179,189-196.

## 6.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쓰레기통모형은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을 설명 한다.
- ② 최적모형은 정책결정자의 직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있다.
- ③ 점증모형은 정책결정의 상황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④ 합리모형은 정책결정자가 확실성을 갖고 행위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해설] ②(틀림) 모형은 제한된 자원, 불확실한 상황, 지식 및 정보의 결여 등으로 비정형적 정책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합리성이 많은 제약을 받게 되므로, 합리적 요소 이외에 결정자의 주관·직관(intuition)·판단이나 영감 혹은 육감 등과 같은 초합리적 요인도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다(양적 분석을 기본으로 하되, 질적 분석을 가미).

[정답] ②

참고 : 위계점 9급행정학개론(2017년판), pp.272-273.

## 7. 일반적인 정책평가의 절차를 순서대로 연결한 것은

|              |                     |
|--------------|---------------------|
| ㄱ. 인과모형의 설정  | ㄴ. 자료 수집 및 분석       |
| ㄷ. 정책목표의 확인  | ㄹ. 정책평가 대상 및 기준의 확정 |
| ㅁ. 평가 결과의 환류 |                     |

- ① ㄱ → ㄴ → ㄷ → ㄹ → ㅁ
- ② ㄴ → ㄷ → ㄱ → ㄹ → ㅁ
- ③ ㄷ → ㄹ → ㄱ → ㄴ → ㅁ
- ④ ㄹ → ㄱ → ㄴ → ㄷ → ㅁ

[해설] 정책평가의 과정(목-사-기준-모형-설계-수집-환류)

- (1) 목표의 확인 : 조직의 공식적 목표뿐만 아니라 실질적 목표를 확인해야 한다.
- (2) 평가성 사정 : 정책평가를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전에 조망적 차원에서 평가를 기획하는 평가성 사정이 이루어진다.
- (3) 평가 기준의 선정 : 효과성, 능률성, 주민만족도, 수익자 대응성, 체제유지도 외에 형평성 등 평가 기준을 선정하는 과정이다. 평가 기준은 목표에 따라 변화되어야 한다.
- (4) 인과모형의 설정 :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가설로 설정한다. 정책은 독립변수, 정책 결과는 종속변수가 된다.
- (5) 연구설계의 개발 : 인과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조사)설계가 필요하다. 연구설계는 일반적으로 진실형설계가 바람직하지만, 준실험설계와 비실험설계도 이용된다.
- (6)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관찰, 면접, 설문, 문헌 등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그리고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한다.
- (7) 평가 결과의 환류 및 활용 : 평가 결과는 정책결정 및 집행체제에 환류되어야 한다.

[정답] ③

참고 : 위계점 9급행정학개론(2017년판), p.302.

## 8. 애드호크라시(adhocracy)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상적 업무 수행의 내부 효율성을 제고한다.
- ② 구성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여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
- ③ 동태적이고 복잡한 환경에 적합한 조직구조이다.
- ④ 낮은 수준의 공식화를 특징으로 하는 유기적 조직구조이다.

[해설] ①(틀림) 일상적으로 조직 내부의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은 관료제(bureaucracy)이다. 애드호크라시(adhocracy)는 환경변화에 신속하고 신속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구조이다.

[정답] ①

참고 : 위계점 9급행정학개론(2017년판), pp.379-381, 338.

## 9. 균형성과표(BSC : Balanced Score Card)의 관점과 측정지표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 ① 학습과 성장 관점 - 직무만족도
- ② 내부 프로세스 관점 - 민원인의 불만을
- ③ 재무적 관점 - 신규 고객의 증감
- ④ 고객 관점 -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구조

[해설] ②(틀림) 민원인의 불만율은 고객 지표에 해당한다. ③(틀림) 신규 고객의 증감은 고객 지표에 해당한다. ④(틀림)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구조는 내부과정 지표에 해당한다.

### <균형성과표의 관점과 지표>

(1) 재무(과거 시각) : 재무지표는 전통적인 후행지표이다. 재무지표의 예로 매출, 자본 수익률, 예산 대비 차이 등을 들 수 있다.

(2) 고객(외부 시각) : 공공부문에서 BSC를 도입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로서, 고객만족도, 정책순응도, 민원인의 불만율, 신규 고객의 증감 등이 대표적이다.

(3) 내부 과정(내부 시각) : 조직 운영과 관련된 지표로서, 의사결정 과정에의 시민참여, 적법적 절차,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구조, 공개 등이 대표적인 지표이다.

(4) 학습과 성장(미래 시각) : 장기적 관점의 지표로서, 조직이 보유한 인적 자원의 역량, 지식의 축적, 정보시스템 구축 등과 관련된다. 학습과 성장 관점의 성과지표에는 학습 동아리 수, 내부 제안 건수, 직무만족도 등이 있다.

[정답] ①

참고 : 위계점 9급행정학개론(2017년판), p.354.

10. 오늘날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다음 중 정책네트워크의 유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하위정부(subgovernment)                      ②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  
③ 이음매 없는 조직(seamless organization)    ④ 정책문제망(issue network)

[해설] ③(틀림) 이음매 없는 조직(seamless organization)은 탈관료제의 한 유형으로서 정책네트워크 유형과 관계 없다.

<Linden의 이음매 없는 조직(seamless organization)>

| 구 분     | 분산적 조직                | 이음매 없는 조직                 |
|---------|-----------------------|---------------------------|
| 직 무     | 협소, 단편적, 구획적, 자율성 낮음. | 광범, 자율성 높음 복수기술적 팀이 협력 수행 |
| 업무 평가   | 투입 기준, 통제 지향적         | 성과와 고객만족 기준, 분권화 지향적      |
| 서비스 신속성 | 시간감각 둔함.              | 시간감각 예민                   |
| 역할 명확성  | 높음.                   | 낮음.                       |

[정답] ③

참고 : 위계점 9급행정학개론(2017년판), pp.228-231.

11. 다음 중 참여와 분권을 본질적 특징으로 포함하는 제도와 거리가 먼 것은?

- ① 계획예산제도                      ② 목표관리제  
③ 영기준예산제도                  ④ 다면평가제

[해설] ①(틀림) 계획예산제도는 대통령에게 권한을 집중시키고, 부처 내에서는 국·과(局·課)보다는 장관에게 권한이 집중된다. 따라서 참여와 분권이라는 이념과는 거리가 먼 제도이다. ② 목표관리제는 상관과 부하의 참여와 합의를 통해 목표설정, 실행, 평가, 환류과정이 진행되며, ③ 영기준 예산은 의사결정단위에서 의사결정패키지는 작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조직 구성원의 참여가 이루어진다. ④ 다면평가제는 상관, 부하, 동료, 민원인 등에 의한 평가를 중시하는 제도이다.

[정답] ①

참고 : 위계점 9급행정학개론(2017년판), pp.655-656.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유형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② 준시장형 공기업  
③ 위탁집행형 공기업                          ④ 기타 공공기관

[해설] ③(틀림) 위탁집행형은 공기업의 유형이 아니라 준정부기관의 유형이다.

### <공공기관의 유형>

(1)공기업(직원 정원이 50명 이상) :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시장성이 큼)

|          |                                                            |
|----------|------------------------------------------------------------|
| 시장형 공기업  | 자산 규모가 2조 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85%) 이상인 공기업 |
|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

(2) 준정부기관(직원 정원이 50명 이상) :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공공성이 큼)

|                |                                        |
|----------------|----------------------------------------|
| 기금관리형<br>준정부기관 |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
| 위탁집행형<br>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

(3) 기타공공기관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관으로서, 본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설치, 임원 임면, 경영실적 평가, 예산, 감사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③

참고 : 위계점 9급행정학개론(2017년판), pp.397-398.

### 13.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의 내용과 효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 ①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 ④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해설] ①(틀림) 강등은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②(틀림)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③(틀림)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를 감한다.  
 ④(옳음)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정답] ④

참고 : 위계점 9급행정학개론(2017년판), p.519.

### 14. 총체주의 예산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계획예산제도(PPBS)와 영기준 예산제도(ZBB)는 대표적 총체주의 예산제도이다.
- ② 정치적 타협과 상호 조절을 통해 최적의 예산을 추구한다.
- ③ 예산의 목표와 목표 간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설정한다.
- ④ 합리적 분석을 통해 비효율적 예산 배분을 지양한다.

[해설] ②(틀림) 정치적 타협과 상호 조절을 통해 최적의 예산을 추구하는 것은 총체주의(합리주의)가 아니라 점증주의이다.

[정답] ②

참고 : 위계점 9급행정학개론(2017년판), pp.599-603.

### 15.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특정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② 공무원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
- ③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 ④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해설] ①(틀림) 특정인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이 예외에 해당한다.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5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정답] ①

## 16. 정부활동의 일반적이며 총체적인 내용을 보여 주어 일반납세자가 정부의 예산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예산의 분류 방법은?

① 품목별 분류

② 기능별 분류

③ 경제성질별 분류

④ 조직별 분류

[해설] ②(옳음) 문제의 질문은 기능별 분류에 대한 설명이다. 기능별 분류는 정부가 수행하는 주요 기능에 따라 예산을 분류하는 방법으로서, 시민을 위한 분류(citizen's classification)라고 하며, 총괄계정에 적합하다.

[정답] ②

참고 : 위계점 9급행정학개론(2017년판), pp.592-593.

## 17. 예산원칙 예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정보원 예산의 비공개는 예산 공개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② 수입대체경비, 차관물자대 등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③ 특별회계와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단일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④ 예산 한정성의 원칙 중 예산 목적 외 사용 금지인 질적 한정성의 원칙은 엄격히 지켜지고 있다.

[해설] ④(틀림) 예산 한정성의 원칙 중 예산 목적 외 사용 금지인 질적 한정성의 원칙의 예외로서 이용과 전용이 있다. 따라서 질적 한정성의 원칙이 엄격히 지켜지고 있다라는 표현은 잘못이다.

<한정성의 원칙과 예외>

(1) 목적 외 사용 금지(질적 한정성) : 예산의 각 항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이용(移用), 전용(轉用)

(2) 초과지출 금지(양적 한정성) : 계상된 금액 이상의 초과지출을 금지한다.

예비비, 추가경정예산

(3)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시기적 한정성) : 회계연도 내에 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연도 지출은 해당 연도 수입으로 충당해야 한다.

예산의 이월(移越), 계속비, 국고채무부담행위, 지난 연도(과년도) 수입, 지난 연도(과년도) 지출, 앞당겨 충당·사용(조상충용, 繰上充用)

[정답] ④

참고 : 위계점 9급행정학개론(2017년판), pp.576-578.

**18. 2009년 서울의 한 고등학생이 개발한 서울버스 앱은 공공데이터의 무료 개방에 따른 부가서비스 개발의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다. 서울버스 앱의 기반이 되는 웹 기술은?**

- ① 하이퍼링크 중심의 Web 1.0 기술
- ② 플랫폼 기반의 Web 2.0 기술
- ③ 시맨틱 웹(Semantic Web) 기반의 Web 3.0 기술
- ④ 사물인터넷 기반의 Web 3.0 기술

[해설] ②(옳음) Web 2.0 개념은 Web의 초창기 환경인 Web 1.0과는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 등 전반적인 정보 순환 과정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Web 1.0 시대에는 텍스트중심의 HTML 문서로 구성된 Web 환경 하에서 소수 전문가들에 의해 정보가 생산되어 사용자는 이를 일방적으로 열람하고 수용하였다. 그러나 Web 2.0 시대에는 다양한 플랫폼의 등장과 Web 제작도구들의 대중적 보급을 가능케 한 Web의 기술적 변화가 나타났고, 이는 정보 생산 과정에서 참여, 공유, 개방 등의 활성화로 정보의 양적·질적 증가를 가져오는 과거의 Web 활용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Web의 활용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서울버스 앱은 공공기관(서울시)이 공개한 공공정보를 이용하여 한 시민이 직접 개발한 앱으로서, 플랫폼 기반의 Web 2.0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Web 기술의 발달>

| 구 분  | 1995~2000년                    | 2005~2010년                           | 2015~2020년                                            |
|------|-------------------------------|--------------------------------------|-------------------------------------------------------|
|      | World Wide Web                | Web2.0                               | Web3.0<br>(Real-World Web)                            |
|      | Government1.0                 | Government2.0                        | Government3.0<br>(U-Government)<br>(Smart Government) |
| 접근성  | 정부 중심                         | 시민 중심                                | 개인 중심                                                 |
|      | 사용자 열람형<br>하이퍼링크 웹 문서 열람      | 사용자 참여형<br>플랫폼 기반의 앱 개발              | 사용자 맞춤형<br>시맨틱 기술에 기반한 인공지능                           |
|      | First-stop-shop<br>(단일 접속 창구) | One-stop-shop<br>(중개기관을 통해서도 접속)     | My Government<br>(개인별 정부서비스 창구)                       |
| 서비스  | 일방향 정보제공                      | 양방향 정보제공                             | 개인별 맞춤 정보제공                                           |
|      | 제한적 정보제공                      | 정보공개 확대                              | 실시간 정보공개                                              |
|      | 서비스의 시공간 제약                   | 모바일 서비스                              | 중단 없는 서비스                                             |
|      | 공급자 위주 서비스                    | 정부·민간 융합 서비스                         |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
|      | 서비스의 전자화                      | 신규 서비스 가치 창출                         | 서비스의 지능화                                              |
| 채 널  | 유선인터넷                         | 무선인터넷                                | 유무선 모바일기기 통합                                          |
| 업무통합 | 단위 업무별 처리                     | 프로세스 통합(공공·민간의 협업)                   | 서비스 통합                                                |
| 기반기술 | 브라우저, 웹 저장                    | 브로드 밴드,<br>Rich Link/ Content Models | 시맨틱 기술, 센서 네트워크                                       |

[정답] ②

참고 : 위계점 9급행정학개론(2017년판), pp.851-852.

**19.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구는?**

-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
- ② 지방분쟁조정위원회
- ③ 갈등관리심의위원회
- ④ 행정협의조정위원회

[해설] ④(옳음)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구는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이다.

<조정위원회>

| 구 분   |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                                              | 행정협의조정위원회                                                                                      |
|-------|-------------------------------------------------------------|------------------------------------------------------------------------------------------------|
| 소 속   | 행정자치부, 사·도                                                  | 국무총리                                                                                           |
| 기 능   |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
| 조 정   |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                                               | 당사자의 신청                                                                                        |
| 조정 효력 |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 : 구속력 없음.<br>② 행정자치부장관, 사·도지사의 조정결정 : 구속력 있음. | 구속력에 대해 의견 다름(지방자치법 시행령은 “협의·조정”의 결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구속력이 없다고 보는 시각이 강하다). |

[정답] ④

참고 : 위계점 9급행정학개론(2017년판), pp.747-749.

## 20.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관위임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와 위임기관이 기관위임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와 위임기관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 ② 지방의회는 단체위임사무에 대해 조사·감사를 시행한다.
- ③ 예방접종에 관한 사무는 통상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로 본다.
- ④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의 감독에서 적극적 감독, 즉 예방적 감독과 합목적성의 감독은 배제되는 것이 원칙이다.

[해설] ①(틀림) 기관위임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위임기관이 그 전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교부금).  
<사무의 구분>

| 구 분      | 개 념                                       | 중앙통제 |      |       | 경비 부담             | 배상 책임       | 지방 의회 관여 | 예 시                                                                            |
|----------|-------------------------------------------|------|------|-------|-------------------|-------------|----------|--------------------------------------------------------------------------------|
|          |                                           | 사후적  |      | 사 전 적 |                   |             |          |                                                                                |
|          |                                           | 합법 성 | 합목적성 |       |                   |             |          |                                                                                |
| 고유 사무    | 전국적 이해관계가 없는 지방의 고유사무                     | ○    | ×    | ×     | 자치단체 부담 (협의의 보조금) | 지방          | 가능       | 자치법규 제정, 주민등록, 상하수도, 소방, 공원, 도서관, 시장, 운동장, 주택, 청소, 위생, 미화, 도축장, 병원, 학교, 도시계획 등 |
| 단체 위임 사무 | 중앙과 지방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무로서 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    | ○    | ○    | ×     | 일부 국가 부담 (부담금)    | 공동          | 가능       | 보건소 설치 및 운영, 예방접종, 사군의 도세 및 수수료 징수, 재해구호, 생활보호, 도로 유지·수선, 하천 보수·유지 등           |
| 기관 위임 사무 | 지방자치단체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사무를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사무 | ○    | ○    | ○     | 전액 국가 부담 (교부금)    | 국가 또는 상급 단체 | 불가능      | 선거, 인구조사, 지적, 국세조사, 경찰, 공유수면매립, 근로기준, 의·약사면허, 도량형, 가족관계등록사무 등                  |

[정답] ①

참고 : 위계점 9급행정학개론(2017년판), p.736.